

“미래산업 국정과제에 대거 포함...이제 ‘광주의 시간’이 온다”

윤장현 광주시장 인터뷰

지난 21일 오후 광주시청 시장실에서 만난 윤장현 광주시장은 조금 지친 기색이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광주의 미래산업으로 강조했던 자동차, 에너지, 문화는 물론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됐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촛불 정국과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만나면서 자신이 그렸던 광주의 미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운 좋은 시장이기도 하다. 윤 시장은 과거 대선 기간 '응답하라! 광주의 미래'라고 외치며, 대선후보들에게 도발적으로 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지밀하게 준비하면서 '광주의 시간'을 기다렸다. 그는 "광주의 후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렸기 때문에 더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가슴 속에서 매일 다짐하는 것은 광주의 후손들이 왜 이 도시에서 태어났는지를 반문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광주의 미래산업이 국정과제에 대거 포함됐다.

▲조기 대선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민선 6기 초기부터 TF팀을 만들고 교수, 전문가들과 함께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바로 쓰이게 됐다. 준비된 상태였던 만큼 완성도가 높았고, 대선기간 적극적으로 '광주에 응답하라'고 외친 것도 먹혀든 것 같다. 광주에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문재인 정부가 답했다고 본다. 대선 이후 갑자기 '세 것'을 요구했다면 이렇게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 국정과제에 포함된 현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의 정립이다.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가 포함됐다는 것이 우선이다. 광주의 미래산업인 미래형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 '광주형 일자리'라는 말이 아직 낯선 느낌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으로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외곽을 개선해 노사상생,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

자동차·에너지·문화 국가 기간산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기회

한전공대 입지 상생 지혜 모아야

2019 세계수영대회 광주 세계에 알리는 기회

이다. 아무도 염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길이지만 광주는 시대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광주는 80년 민주화 과정에서 경험했던 '주먹밥과 현혈'이라는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와 생산성에 주목하고 노사와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 및 장시간 노동과 임금격차 등에 변화를 주자는 것이다. 노사민정 대화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화두이고 공공적 의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도 맥락이 닿는다.

-한전공대 입지 문제로 광주·전남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공급이 중요한 만큼 한전공대는 꼭 설립돼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 광주와 전남이 유치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한전은 사실 광주 몫이었는데, 박광태 당시 시장이 한전을 가져오기 위한 통큰 결단으로 나주에 가게 됐다. 이 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 상생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파이를 키워서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대학 미래를 위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좋을지에 대해 지자체가 일일이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광주시는 전남과 함께 한전과 중앙정부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광주와 전남은 뿌리가 하나다. 책임을 지는 데 행정의 경계가 필요하지만, 모든 파이를 만드는 데 행정의 경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서남해권이라는 큰 미래 파이를 위해 상생의 자세로 지혜



2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미래형 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과 관련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를 모아야 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민선 6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5월 대선이 계기가 돼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광주 미래산업이 대거 포함되고, 거기에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확히 맞았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오는 8월이나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시장으로서 민관의 협력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거버넌스'라는 말 이전에 광주에는 '광주공동체'라는, 죽음으로 지켜낸 말이 있다. 10일간의 항쟁기간 '광주코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관치 중심의 사고로 인해 자치와 협치에 소홀했는데, 앞으로 자치와 협치는 과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감안해야 할 지향점이며, 공동체의 완성 과정이다. 시민총회, 시민촛불, 주권혁명 등 참여민주주의를 보완하지 않으면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디고 어렵더라도 공동체를 지키고 함께 미래를 그리려는 변화를 가져올 생각이다.

-다음주 중요한 일정이 있다.

▲오는 30일 2017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대외 기회를 받는다. '광주의 시간'에 열리는 중요한 국제대회만큼 잘 준비해서 인권, 평화, 문화, 자동차, 에너지 등 광주의 자랑거리를 전세계에 알리겠다. 개폐막식의 장소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상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당당한 역사의 도시' 광주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자동차, 문화 등이 국정과제로 선택됐는데,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앞으로 20~30년 후를 내다보면서 '광주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자동차·에너지 산업 어디까지 왔나

빛그린 국가산단에 인프라 구축 한창 한전과 함께 에너지기업 250개 박차

미래형 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이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광주 미래산업을 완성하는 시도가 본격화된다. 앞으로 이들 산업에 정부부처의 정책·예산 지원이 뒷받침되면 보다 신속하면서 질 높은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광주시는 산업화 시대 상대적으로 뒤쳐진 지역 산업구조에 변화를 불러넣고 산업지형을 미래시대에 걸맞게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형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 만든다=미래형 자동차와 관련 광주시는 이미 '친환경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3030억원을 투입해 현재 조성중인 빛그린 국가산단에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친환경 자동차안전연구원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완성차 라인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중국의 조이통 자동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0년까지 광주에 2500억원을 투자해 연 10만대 규모 완성차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이통 자동차와의 협력관계는 지난해 9월 광주시와 CJ대한통운, 조이통코리아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다. 이 협약에 따르면 조이통코리아가 생산한 전기화물차를 CJ대한통운이 구매해 택배차량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난 3월에는 유럽 최고의 자동차 연구기관인 영국의 헝리바 마이러와도 손을 잡고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기술정보 교류 및 기술개발을 협력하기로 했다. 친환경 자동차 선도시로의 입지 구축도 강화하고 있다.

◇전남과 함께 세계적 에너지신산업 거점으로 도약=광주시는 나주 빛그린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과 함께 광주·전남 일대에 에너지밸리를 조성 중이다. 시는 2020년까지 에너지기업 250개 유치, 고용창출 5000명, 매출 2조원, 1등 기술 확보 20개를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관련기관과 기업을 담아내기 위한 남구 대촌동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조성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산단은 48만5000㎡(15만평)규모로 작년 12월 착공해 현재 21.2%의 공청률을 보

이고 있으며 201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국가산단에 입주예정인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LS산전 등 에너지관련 연구기관과 업체의 조기 입주를 위해 12월까지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산단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94만4000㎡(29만평)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의결돼 현재 산업단지 지정절차와 산업단지 계획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올 연말까지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토지매입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53개에 달해 성공 분량이 기대된다. 에너지신산업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에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이 발의되고 산업부와도 MOU를 체결해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산업 허브도시가 구체화되고 있다.

◇일자리 위기 '광주형'으로 돌파=광주시는 한국경제가 산업분야와 노사 문화에 획기적인 혁신없이 성장정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광주형 일자리'를 표방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으로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외곽을 개선해 노사상생,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이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주요 실천 의제를 담은 사회협약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역 노·사·민·정도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윤중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한 22명의 노·사·민·정 각 분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우주항공축제 추진위원회

제10회

고흥우주항공축제

The 10th Goheung Aero-Space Festival

7.29^토 - 8.2^수

주요 프로그램

BigBang 1
나로우주센터

나로우주센터 발사현장견학
나로우주과학관 전시·체험

BigBang 2
우주극장

러시아 360 돔 극장

주·야간행사

BigBang 3
별★별 프린지

야간

매일 저녁 펼쳐지는 별, 별 환타지소 레이저퍼포먼스, LED트론댄스 등
7.29 - 8.1 매일밤 10시까지
배틀로봇 탐승체험